



의안번호

제104호

**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김진호 의원 외 8명
발의연월일	2017. 11. 17.

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진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104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7.

대표발의자 : 김진호

공동발의자 : 김형도, 구본선, 백승권,
임종진, 이계천, 이금자,
민병춘, 김만중

1. 제안이유

-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권 보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재산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변경함(안 별표 1)
- 나. 도시지역 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,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변경함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「논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로 주민의견 수렴
- (2) 예고기간 : 2017. 11. 22. ~ 11. 26.(5일간)
- (3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.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김 진 호 의원 등 9인

[별표 1]

가축사육제한구역(제7조 관련)

구 분	제 한 구 역	비 고
도시지역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) 및 그 인접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지역(생산녹지지역은 제외한다) 내 ○ 도시지역(생산녹지지역은 제외한다) 경계선 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,000미터 이내 지역 	
도시지역 외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○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. 다만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·허가받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%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% 이내에서 가능하다. 	
<p>※ 제한거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돼지, 개, 닭, 오리, 메추리 : 2,000미터 이내 - 소, 젖소, 양, 염소, 사슴, 말 : 500미터 이내 		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<p>[별표 1]</p> <p>가축사육 제한지역(제7조 관련)</p>			<p>[별표 1]</p> <p>가축사육 제한지역(제7조 관련)</p>		
구분	제한지역	비고	구분	제한지역	비고
도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○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		도시지역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) 및 그 인접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지역(생산녹지지역은 제외한다) 내 ○ 도시지역(생산녹지지역은 제외한다)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거리 2,000미터 이내 지역 	
도시지역 외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○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. 다만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·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해당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%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% 이내에서 가능하다. 		도시지역 외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○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. 다만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·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해당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%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% 이내에서 가능하다. 	
<p>※ 제한거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돼지, 개, 닭, 오리, 메추리 : <u>2,000m</u> 이내 - 소, 젖소, 양, 염소, 사슴, 말 : <u>500m</u> 이내 			<p>※ 제한거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돼지, 개, 닭, 오리, 메추리 : <u>2,000미터</u> 이내 - 소, 젖소, 양, 염소, 사슴, 말 : <u>500미터</u> 이내 		

□ 관계법령 발췌서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<개정2015.12.1.>

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수변구역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
5.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 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(危害)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구역(이하 "가축사육 제한구역"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2014.3.24.]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1. 도시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주거지역: 거주자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상업지역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공업지역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녹지지역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0조(용도지역의 세분)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의 시장(이하 “대도시 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1. 주거지역

가. 전용주거지역: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(1) 제1종전용주거지역: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(2) 제2종전용주거지역: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일반주거지역: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(1) 제1종일반주거지역: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(2) 제2종일반주거지역: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(3) 제3종일반주거지역: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준주거지역: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2. 상업지역

가. 중심상업지역: 도심·부조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일반상업지역: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근린상업지역: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유통상업지역: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

3. 공업지역

가. 전용공업지역: 주로 중화학공업,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일반공업지역: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준공업지역: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, 주거기능·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

4. 녹지지역

가. 보전녹지지역: 도시의 자연환경·경관·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

나. 생산녹지지역: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

다. 자연녹지지역: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, 도시확산의 방지,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